

전북교육 대전환 기틀 마련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4년 임기의 절반이 지났다.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난 2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본다.

아·신·나(아침운동 신명나계) 프로그램 운영 →

▲기초학력을 넘어 기본학력 신장으로
학력신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다. 기초학력은 물론 기본학력까지 학력 전반을 신장시켜 전북의 아이들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2023년을 기초학력 책임제 원년으로 삼아 초등 2학년부부터 고1까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전면 실시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3월 진단검사 시행 이후 12월 실시한 3차 향상도 평가 결과, 평균 초등학교 65.5%, 중학교 36.9%, 고등학교 30.5%의 기초학력 미달 감소율을 보여 매우 고무적이었다.
올해는 기초학력을 넘어 기본학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후 초등 3~6학년 학생 모두에게 통합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학습 진단을 넘어 심리·정서 진단까지 다면적으로 지원한다.

과 조화를 이루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했다.

▲미래교육 환경 구축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도내 모든 학교에 차례로 도입된다.
이를 대비해 전북교육청은 AI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올해 8월 말 완료된다. 초등 3학년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해 디지털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오는 8월 말까지 전체 학생에게 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되면 2학기부터는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활용 수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또한 학생 맞춤형 학력 지원을 위해 초등 3학년부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AI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해 방과후 또는 가정에서 자기수준에 맞는 수업을 듣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생은 학습플래너에 학습계획과 결과를 기록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중·고등학생은 학습메니저 앱인 '올라'를 통해 개인 학습을 기록, 관리한다.
특히 AI기반 코스웨어로 학습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학교 교과보충 프로그램 시간을 통해 질문할 수 있고, 내용을 이해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선순환의 학력 신장 프로그램이다.

학력신장, 가장 역점 두고 추진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통해 학생인권·교권 균형·조화 이뤄
디지털교육 가능한 환경 조성도
지자체와 교육발전특구 등 추진

지난 2년간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걸맞은 정책 충실히 이행



- ① 교육발전특구 선정
- ②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 ③ 협약형 특성학교 컨소시엄 협약
- ④ 학생의회 정기회
- ⑤ 농촌유학 프로그램
- ⑥ 국제교류수업
- ⑦ 미래교육 환경 구축

중·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력향상 도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토대로 학년별·교과별·영역별 성취율을 분석해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내에서는 34개 중학교와 52개 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철관도 2023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2024년에는 초 3~5학년, 중 1~3학년, 고 3학년 4,340명 교실에 설치된다. 2025년까지 보급을 완료해 모든 교실에서 스마트철관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미래교육캠퍼스 설립도 순항 중이다.
현재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요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옛 전라중 부지에 설립되는 미래교육캠퍼스에는 △미래기술체험관 △미래진로체험관 △미래교육관 △공유관 △e-스포츠관 등이 들어선다.
뿐만 아니라 교사연수에도 많은 공을 들여왔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 최초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미래교육캠퍼스 설립도 순항 중이다.
현재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요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옛 전라중 부지에 설립되는 미래교육캠퍼스에는 △미래기술체험관 △미래진로체험관 △미래교육관 △공유관 △e-스포츠관 등이 들어선다.
뿐만 아니라 교사연수에도 많은 공을 들여왔다.



높은 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2,500명이 학생 해외연수에 참여해 다양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키웠다.
올해는 그 숫자를 더욱 확대해 2,800명의 학생이 해외연수에 참여한다. 학생 스스로 기획·추진하는 '글로벌 프런티어'를 신설했고, 국제교류수업 학교 유형 다양화 및 해외 교류 국가를 영국, 일본, 호주 등 18개국으로 확대했다.

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학급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유·초·중·고교에 61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했다.
전북에듀케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비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모든 학년에 지원, 18만2,000여명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총 350여억원이 투입된다.

무너진 교권을 살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서거석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조례를 근거로 기존의 학생인권센터가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조직과 기능이 확대 개편됐다. 전북교육인권센터에는 교육활동보호팀이 설치돼 교권침해 조사와 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서이초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지난해 8월에는 선제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대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지역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협력 강화
지역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탄탄한 교육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학령인구 감소, 우수인재 유출 등의 당면과제는 교육청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지자체는 물론 대학, 기업, 나아가 민간단체까지 지역의 모든 힘을 모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14개 시·군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14개 시·군의회의는 정책간담회를 통한 소통의 폭을 넓혀왔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발전특구 △학교복합시설 △협약형 특성학교 등을 함께 추진 중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도가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등 5개 시군과 함께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목표로 공모를 신청, 5개 시군 모두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진학 정보에 갈등을 겪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대입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2023년에는 총 140회의 크고 작은 입시설명회를 도내 모든 지역에서 실시했으며, 의약계열, 사관학교, 이공계 특성화대, 서울 주요대, 전북권 대학 등 각종 설명회에 4,000여명의 학생·학부모가 참가했다.
올해는 입시설명회와 대면상담을 더욱 확대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모든 시군에서 최소 2회 이상의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진학상담실을 개설해 진학 정보 공백이 없도록 했다.

작은학교를 살리고자 도입한 전북농촌유학은 2022년 하반기 27명으로 시작해 2023년 84명, 2024년 13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1학과 2학과 두 번에 걸쳐 농촌유학을 모집했다.
더불어 농촌유학생 모집 기간이 아닌 시기에 전학한 학생을 예비유학생으로 지정한 후 다음 학기부터 농촌유학생으로 인정하는 예비유학생제를 도입했다.

137개교에 녹화·녹음 장치와 비상벨이 설치된 민원상담실을 구축했고, 교원의 휴대전화번호를 학생이나 보호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안심번호 서비스도 도입했다.
또 악성 민원 등에 대한 총괄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더욱 강화됐다.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학생을 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위임을 받는 상황이라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조사를 받는 교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도 강화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인데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난 4월 18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교육감이 대리 고발한 바 있다.
학생인권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유지한다. 다만,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이와 함께 미래교육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미래교육캠퍼스 설립도 순항 중이다.
현재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요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옛 전라중 부지에 설립되는 미래교육캠퍼스에는 △미래기술체험관 △미래진로체험관 △미래교육관 △공유관 △e-스포츠관 등이 들어선다.
뿐만 아니라 교사연수에도 많은 공을 들여왔다.

▲모든 정책의 중심엔 '학생'
전북교육청은 지난 2년간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정책들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학생해외연수 고도화,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특수학교(급) 확충, 전북에듀케어 전면 지급, 아·신·나(아침운동 신명나계) 운영 등이 그것이다.
학생해외연수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응이

이와 함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먼저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위해 동부권(무주·진안·정읍)과 군산·전주에 특수학교 설립을 확정했고, 특수학교가 없는 서부권(김제·부안)에도 설립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단 한 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만 있어도 특수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년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임기 반환점을 돈 만큼 전반기에 세운 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